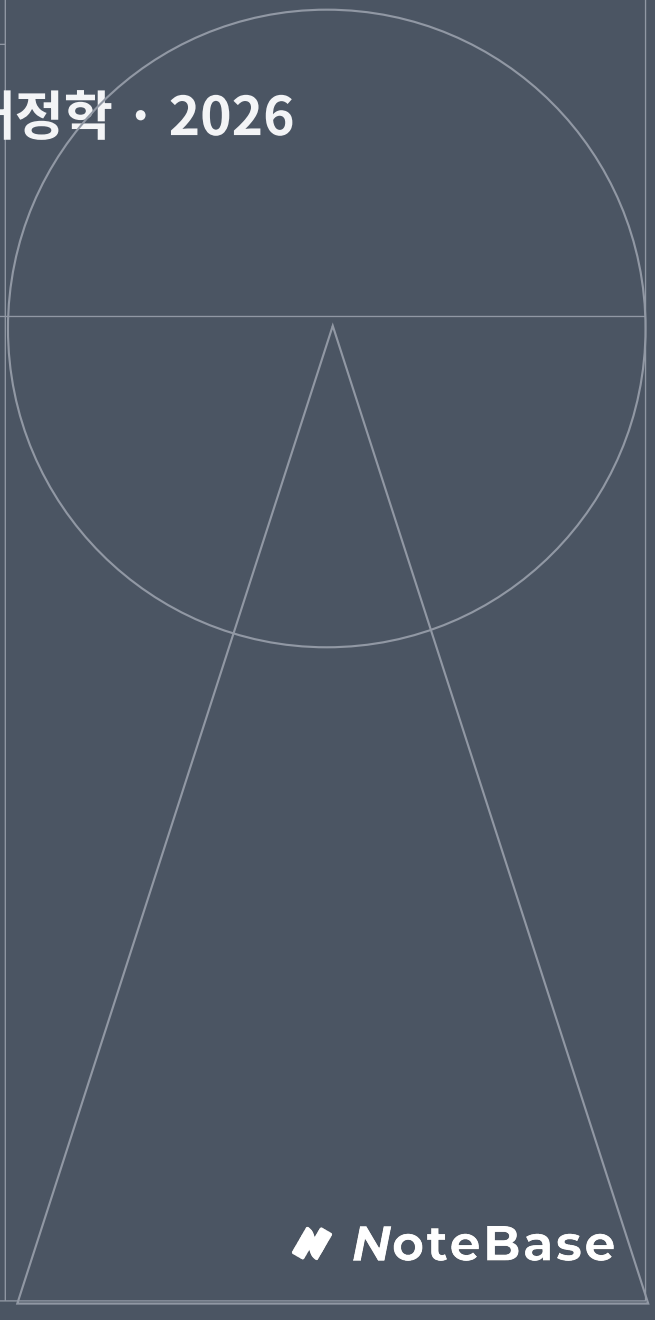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재정학 · 202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재정학 · 2026

공무원/경찰/공채(경위) · 재정학 · 2026

문 1. 파레토 최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가 파레토 최적인 상태이다.

② 교환의 파레토 최적은 두 소비자의 무차별곡선에서 한계대체율이 같은 상태이다.

③ 생산의 파레토 최적은 두 생산자의 등량곡선에서 한계기술대체율이 같은 상태이다.

④ 종합적 파레토 최적은 두 경제주체의 생산가능곡선에서 한계전환율이 같은 상태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종합적 파레토 최적은 교환과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하면서 **소비자의 한계대체율과 생산의 한계전환율이 일치**하는 상태이다. 두 경제주체의 한계전환율만 같다는 조건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재화 구성이 생산되는지 판단할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파레토 개선은 누구의 후생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 사람의 후생을 높이는 변화이다.
교환·생산·생산물 구성의 효율성은 이러한 개선 가능성을 각각 다른 측면에서 점검한다. 아래의 한계율 일치 조건은 통상적인 매끄러운 곡선의 내부해를 전제로 한다.

① O: 파레토 최적에서는 다른 사람의 후생을 줄이지 않고 누군가의 후생을 더 높일 수 없다. 따라서 파레토 개선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의이며, 소득분배가 공평하다는 뜻은 아니다.

② O: 교환의 효율성은 두 소비자의 한계대체율이 같을 때 충족된다. 한계대체율은 한 재화를 더 소비하기 위해 포기할 의사가 있는 다른 재화의 양이다. 두 사람의 비율이 다르면 상호 이익이 되는 교환이 가능하므로 아직 교환의 파레토 최적이 아니다.

③ O: 생산의 효율성은 동일한 두 생산요소에 대한 생산자들의 한계기술대체율이 같을 때 충족된다.
한계기술대체율은 산출량을 유지하면서 한 생산요소를 다른 요소로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다르면 생산요소를 재배분하여 다른 재화의 생산을 줄이지 않고 한 재화의 생산을 늘릴 여지가 있다.

④ X: 종합적 파레토 최적은 교환과 생산의 효율성에 더하여 **한계대체율과 한계전환율의 일치**를 요구한다.
한계대체율은 소비자가 평가하는 재화 간 교환비율이고, 한계전환율은 한 재화를 추가 생산할 때 포기해야 하는 다른 재화의 양이다. 소비자의 평가와 생산의 기회비용이 달라서는 생산물 구성을 바꾸어 후생을 개선할 수 있으므로, 두 경제주체의 한계전환율만 같다고 설명한 것은 부적절하다.

NoteBase

문 2. 두 소비자의 자원배분이 교환을 통하여 계약곡선 (contract curve) 상의 어느 한점에서 다른 한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두 사람의 후생에 발생하는 변화로 옳은 것은?

① 두 사람 모두 이익이다.

② 두 사람 모두 손해이다.

③ 어느 누구의 후생도 변하지 않는다.

④ 한 사람은 이익이지만 다른 사람은 손해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계약곡선 위의 배분은 이미 파레토 효율적이므로 다른 사람의 손해 없이 한 사람의 후생만 더 높일 수 없다. 곡선 위의 다른 효율적 배분으로 이동하면 **한 사람의 후생 증가와 다른 사람의 후생 감소**가 함께 나타난다.

핵심 풀이

계약곡선은 두 소비자 사이에서 교환의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는 배분의 집합이다. 이 곡선 위에서는 **다른 사람의 후생을 낮추지 않고 한 사람의 후생을 더 높이는 교환**이 불가능하다. 이는 각 배분의 효율성을 뜻하며, 모든 배분이 두 사람에게 같은 효용을 준다는 뜻은 아니다.

계약곡선 위의 서로 다른 배분으로 이동하면 소비자 사이의 재화 배분이 달라진다. 통상적인 두 소비자 교환 모형에서는 한 사람에게 더 유리한 효율적 배분으로 옮길수록 다른 사람의 후생은 낮아진다. 두 사람 모두 이익이라면 출발점은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고, 둘 다 손해라면 도착점은 출발점에 의해 파레토 개선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지 않다.

따라서 계약곡선 위의 이동을 두 사람의 후생이 모두 증가하거나 모두 감소하는 변화, 또는 후생이 항상 그대로인 변화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은 이익을 얻고 다른 사람은 손해를 보는 변화**이므로 ④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3. 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의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은 경우

② 시장구조가 독과점인 경우

③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④ 거래 당사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이윤극대화 추구 자체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니다. 외부효과 등 다른 시장실패가 없는 완전경쟁에서는 기업의 이윤 추구가 가격과 한계비용을 일치시켜 효율적 자원배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외부효과가 없는 표준적인 시장 모형에서 가격은 소비자의 한계편익을 나타낸다.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으면 **추가 생산의 편익이 비용보다 큰데도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이 발생한다.

② O: 독과점 기업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쟁적 수준보다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을 높일 수 있다. 그 결과 상호 이익이 되는 일부 거래가 사라져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③ X: 기업의 **이윤극대화 추구 자체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니다**. 외부효과나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없는 완전경쟁에서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할 때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생산량을 선택하여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문제는 이윤을 추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시장지배력 등으로 경쟁시장의 효율성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데 있다.

④ O: 거래 당사자가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상품의 품질이나 상대방의 행동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거래를 위축시키거나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게 할 수 있다.

NoteBase

문 4.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사 교육에 국정 교과서의 사용을 의무화한다.

② 독감예방주사를 맞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오염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한다.

④ 담배 소비에 세금을 부과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외부효과의 내부화는 **제삼자에게 미치는 편익이나 비용을 행위자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국정 교과서 사용 의무화는 교육내용을 통일하는 조치로, 그러한 편익이나 비용을 반영하는 수단이라는 연결이 없다.

선지별 해설

외부효과는 거래 당사자의 행동이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제삼자에게 편익이나 비용을 주는 현상이다. 내부화는 행위자가 이를 고려하도록 유인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X: 국정 교과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교과서의 선택과 교육내용을 통일하는 조치**이다. 이 조치만으로는 어떤 외부편익이나 외부비용을 발생시킨 사람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지 연결되지 않으므로, 외부효과 내부화의 사례로 보기 어렵다. 정부가 개입한다는 사실만으로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것은 아니다.

② O: 독감 예방접종은 접종자 자신을 보호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을 낮추는 외부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 접종 보조금은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 **타인에게 돌아가는 편익까지 고려한 접종을 유도**하므로 긍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는 수단이다.

③ O: 오염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으면 기업은 오염을 배출할 때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보유 배출권을 팔지 못하는 기회비용을 부담한다. 이에 따라 **오염배출에 경제적 비용이 부여**되어 기업이 배출량과 저감 노력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하게 된다. 실제 배출 억제 수준은 배출권의 총허용량 등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

④ O: 흡연은 간접흡연 피해처럼 소비자 이외의 사람에게 외부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 외부비용을 반영하도록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이 높아져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소비를 조정하게 된다.

NoteBase

문 5. 다음 중 코즈(Coase)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권의 행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② 소득의 불균등한 분배를 완화시킬 수 있다.

③ 소유권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는 상관없다.

④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강조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코즈 정리는 거래비용이 없을 때 당사자 간 협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최초 재산권 배분은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므로 **소득 불균등의 완화를 보장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코즈 정리에서는 누가 어떤 자원을 이용하거나 피해를 막을 권리를 갖는지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권리의 범위가 분명해야 당사자들이 권리의 이전이나 보상에 관해 협상할 수 있다.

② X: 코즈 정리가 설명하는 것은 외부효과가 있는 상황에서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이지 소득분배의 형평성이 아니다**. 효율적인 합의가 이루어져도 누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받는지는 최초의 권리 배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득 불균등의 완화가 보장되지 않는다.

③ O: 거래비용이 없고 자유로운 협상이 가능하다는 기본 가정 아래에서는 **최초 재산권이 어느 쪽에 귀속되든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만 최초의 권리 귀속이 당사자의 소득이나 부의 분배에도 무관하다는 뜻은 아니다.

④ O: 당사자 간 협상으로 외부효과를 조정할 수 있다면 정부가 직접 생산량을 규제하거나 교정세를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이는 **사적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재산권의 설정·보호라는 정부 역할까지 부정하거나 현실의 거래비용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6. 생산과정에서 공해를 배출하는 연탄공장에 정부가 피구세(Pigouvian tax)를 부과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연탄공장은 사적 한계비용이 상승한 것으로 인식한다.

② 연탄 생산의 사회적 한계비용 곡선을 하방이동시킨다.

③ 연탄시장에서 사회후생은 증가한다.

④ 연탄의 시장거래량은 감소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피구세는 공해 피해를 생산자의 선택에 반영하도록 **세금 포함 사적 한계비용을 높인다**. 사회적 한계비용 곡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과잉생산을 줄여 외부효과를 내부화한다.

선지별 해설

공해라는 생산의 외부불경제가 있으면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적 한계비용에 한계외부비용을 더한 값이다. 피구세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생산량에서의 한계외부비용을 세율로 삼아 생산자가 외부 피해를 의사결정에 반영하게 한다.

① O: 연탄을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추가 세금도 부담하므로, 공장은 **세금을 포함한 사적 한계비용이 높아진 것**으로 인식한다. 이로써 종전에 고려하지 않던 공해 피해가 생산 결정에 반영된다.

② X: 피구세는 **생산자가 부담하는 한계비용을 높이는 수단**이지 사회적 한계비용 곡선을 아래로 이동시키는 수단이 아니다. 동일한 생산량에서의 생산 기술과 공해 피해 조건이 그대로라면 사회적 한계비용 곡선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세금으로 생산량이 줄어 총공해 피해가 감소하는 것과 비용곡선의 하방이동은 다르다.

③ O: 외부비용을 무시한 시장에서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연탄이 많이 생산된다. 적정한 피구세는 **사회적 비용이 편익보다 큰 과잉생산**을 줄여 순사회후생을 높인다. 이는 외부비용에 맞게 설정된 교정세의 효과이며, 세율을 무조건 높일수록 후생이 커진다는 뜻은 아니다.

④ O: 세금 부담으로 생산자의 세금 포함 공급비용이 높아지므로,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시장거래량은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을 향해 감소**한다. 공해로 인한 외부비용을 반영하여 과잉생산을 줄이는 것이 피구세의 목적이다.

NoteBase

문 7. 순수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소비자는 동일한 수요량에서 동일한 한계편익을 누린다.

② 시장수요는 개별수요를 수직으로 더한 것이다.

③ 배제불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이다.

④ 경합성이 없는 재화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순수공공재는 여러 사람이 같은 공급량을 함께 소비하지만, 그 공공재를 평가하는 선호가 달라 **개인별 한계편익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같은 양을 소비한다는 사실이 같은 편익을 얻는다는 뜻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순수공공재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함께 갖는다.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이 줄지 않고,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렵다.

① X: 각 소비자는 동일하게 공급된 공공재를 함께 소비하지만, 선호와 필요가 다르므로 **동일한 공급량에서도 한계편익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방범 서비스를 제공받아도 추가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려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동일한 소비량과 동일한 한계편익을 혼동한 설명이다.

② O: 순수공공재의 사회 전체 수요는 같은 공급량에서 각 개인의 한계편익, 즉 한계지불의사액을 합하여 구한다. 따라서 개별수요곡선을 **수직으로 합산**한다. 같은 가격에서 개인별 수요량을 더하는 사적재의 수평합과 구별된다.

③ O: 배제불가능성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성질이다. 이 때문에 비용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공급한 공공재의 편익을 얻으려는 무임승차 유인이 생긴다.

④ O: 비경합성은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이나 편익을 줄이지 않는 성질이다. 이미 공급된 순수공공재에 소비자가 한 명 더 참여하는 데 따른 추가 비용은 없지만, 공공재의 공급량 자체를 늘리는 비용까지 0이라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8. 세 명의 소비자 A,B,C가 있을 때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조건을 옳게 표현한 것은?

① 한계생산비용 = (A의 한계편익 ÷ B의 한계편익) ÷ C의 한계편익

② 한계생산비용 + A의 한계편익 = B의 한계편익 ÷ C의 한계편익

③ 한계생산비용 - A의 한계편익 = B의 한계편익 + C의 한계편익

④ 한계생산비용 = A의 한계편익 × B의 한계편익 × C의 한계편익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공공재 한 단위의 추가 공급은 세 사람에게 함께 편익을 주므로, 효율적 공급조건은 **한계생산비용과 개인별 한계편익의 합이 같아지는 것**이다. A의 한계편익을 좌변으로 옮기면 나머지 두 사람의 한계편익 합과 대응한다.

핵심 풀이

순수공공재는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이 줄지 않으므로, 세 소비자는 같은 공급량을 함께 이용한다. 공공재를 한 단위 늘릴 때 사회 전체가 얻는 편익은 **그 공급량에서 각 소비자가 얻는 한계편익의 합**이다.

세 소비자의 한계편익을 각각 MB_A, MB_B, MB_C, 한계생산비용을 MC라고 하면 효율적 공급조건은 $MC = MB_A + MB_B + MB_C$이다. 한계편익의 합이 한계비용보다 크면 공급을 더 늘리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이면 줄이는 것이 유리하므로 두 값이 같아지는 수준이 기준이 된다.

개별 한계편익을 나누거나 곱하는 ①·②·④의 방식은 사회적 한계편익을 구하는 방법이 아니다. 같은 수량에서 한계편익을 더하는 **수직합**을 적용한다.

효율적 공급조건에서 A의 한계편익을 좌변으로 옮기면 $MC - MB_A = MB_B + MB_C$가 되므로, 이 조건을 표현한 선택지는 ③이다.

NoteBase

문 10. 투표의 역설과 관련 있는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가. 투표거래
나. 의사진행순서
다. 다봉선호
라. 특수이해집단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가, 라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다수결로 집계한 선호가 순환하면 **표결 순서에 따라 최종 승자가 달라질 수 있다**. 공통 기준의 단봉선호라는 제약이 없는 다봉선호 상황에서는 이러한 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투표의 역설은 개인의 선호가 일관되어도 다수결로 집계한 사회적 선호가 순환할 수 있다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다수가 A보다 B를, B보다 C를 선호하면서도 C보다 A를 선호하면 모든 대안을 이기는 하나의 안정된 대안을 정하기 어렵다.

가. 직접 관련 없음: '투표거래'는 서로 다른 안건에서 상대방의 안건을 지지해 주기로 합의하여 표를 교환하는 행위이다. **안건 간 지지의 교환**을 뜻하며, 다수결 선호가 순환한다는 투표의 역설 자체를 설명하는 개념은 아니다.

나. 관련 있음: 다수결 선호가 순환하면 어떤 두 대안을 먼저 표결하고 어떤 대안을 나중에 비교하는지에 따라 최종 승자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의사진행순서가 최종 선택에 영향**을 주며, 의제를 통제하는 사람이 결과를 유도할 여지가 생긴다.

다. 관련 있음: 다봉선호는 대안을 하나의 기준으로 배열했을 때 선호가 여러 봉우리를 갖는 경우이다. 모든 유권자가 같은 기준에서 단봉선호를 갖는다는 제약이 없으면 **다수결 선호의 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다봉선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역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라. 직접 관련 없음: '특수이해집단'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얻으려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집단이다. **집중된 이익을 위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관한 개념이며, 선호의 순환을 뜻하는 투표의 역설과는 구별된다.

투표의 역설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나의 의사진행순서와 다의 다봉선호이므로, 이 둘을 묶은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1. 세 명의 학생 갑, 을, 병은 학과 잠바의 색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선호를 가지고 있다. 보다(Borda) 방식의 투표로 학과 잠바의 색상을 결정할 때 옳은 것은?

	1위	2위	3위
갑	검정	파랑	빨강
을	파랑	빨강	검정
병	빨강	파랑	검정

① 투표의 역설이 발생하여 색상이 결정되지 않는다.

② 검정

③ 파랑

④ 빨강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보다 방식은 **첫 순위뿐 아니라 모든 순위의 점수**를 합산한다. 1위 2점·2위 1점·3위 0점을 주면 파랑은 1위 한 표와 2위 두 표를 받아 4점으로 가장 높다.

계산 과정

보다(Borda) 방식은 각 유권자가 매긴 모든 순위에 점수를 부여하고, 대안별 총점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한다. 세 색상이 있으므로 1위에 2점, 2위에 1점, 3위에 0점을 부여하여 계산한다.

표에서 갑의 선호는 검정 → 파랑 → 빨강, 을의 선호는 파랑 → 빨강 → 검정, 병의 선호는 빨강 → 파랑 → 검정이다. 각 순서의 왼쪽부터 1위, 2위, 3위이다.

검정: 갑에게 1위이므로 2점, 을과 병에게는 각각 3위이므로 0점씩을 받는다. 총점은 2 + 0 + 0 = 2점이다.

파랑: 갑에게 2위로 1점, 을에게 1위로 2점, 병에게 2위로 1점을 받는다. 총점은 **1 + 2 + 1 = 4점**이다.

빨강: 갑에게 3위로 0점, 을에게 2위로 1점, 병에게 1위로 2점을 받는다. 총점은 0 + 1 + 2 = 3점이다.

파랑 4점, 빨강 3점, 검정 2점으로 파랑의 총점이 가장 높으므로 선택지 ③과 일치한다. 각 색상이 1위 표를 한 표씩 받았더라도, 보다 방식은 다른 순위의 점수도 합산하므로 이 사실만으로 미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12. 애로우가 제시한 바람직한 사회후생함수가 만족해야 하는 공리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확실성

② 이행성

③ 비독재성

④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애로우의 논의는 개인의 선호를 일관된 사회적 선호로 집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확실성은 요구되는 공리가 아니며**, 사회적 선호의 이행성, 비독재성,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이 요구된다.

선지별 해설

애로우의 사회후생함수는 개인들의 선호순서를 종합하여 사회 전체의 선호순서를 정하는 규칙이다. 이 문제의 O/X는 각 용어가 그 규칙에 요구되는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뜻한다.

① X: 확실성은 애로우가 제시한 바람직한 사회적 선택의 공리가 아니다. 선택 결과가 확실한지에 관한 문제와 여러 개인의 선호를 사회적 선호로 집계하는 문제는 구별된다. 사회적 선호를 일관되게 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이행성 등의 합리성 조건이지, 미래 결과의 확실성이 아니다.

② O: 이행성은 사회가 A를 B보다 선호하고 B를 C보다 선호하면 A를 C보다 선호해야 한다는 일관성 조건이다. 이를 어기면 A보다 B, B보다 C, C보다 A를 선호하는 식의 순환이 생겨 일관된 사회적 순위를 정하기 어렵다.

③ O: 비독재성은 다른 구성원의 선호와 무관하게 특정 개인의 선호가 언제나 사회적 선호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다. 어느 한 사람이 항상 결정권을 독점하는 집계 규칙을 배제한다.

④ O: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은 A와 B의 사회적 우열이 개인들의 **A와 B 사이의 선호**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모든 개인의 A와 B에 대한 상대적 순위가 같게 유지된다면, 제3의 대안 C에 대한 선호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A와 B의 사회적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NoteBase

문 13. 세 종류의 술 와인, 맥주, 청주에 대한 박씨, 남씨, 조씨의 선호순서가 다음과 같을 때 꽁도세(Condorcet) 승자는?

박씨 : 와인>맥주>청주
남씨 : 맥주>청주>와인
조씨 : 청주>맥주>와인

① 와인
② 맥주
③ 청주
④ 박씨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맥주는 와인과 비교하면 남씨·조씨의 지지를, 청주와 비교하면 박씨·남씨의 지지를 얻는다. 따라서 **다른 모든 대안을 일대일 다수결에서 이기는** 꽁도세 승자이다.

계산 과정

꽁도세 승자는 다른 모든 대안과 일대일로 비교했을 때 각각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 대안이다. 세 사람이 투표하므로 각 비교에서 2표 이상을 얻으면 승리하며, 첫 번째 선호만 세는 방식과는 다르다.

와인과 맥주: 박씨는 와인을, 남씨와 조씨는 맥주를 더 선호한다. 따라서 **맥주가 2표 대 1표로 승리**한다.

맥주와 청주: 박씨와 남씨는 맥주를, 조씨는 청주를 더 선호한다. 따라서 **맥주가 2표 대 1표로 승리**한다.

와인과 청주: 박씨는 와인을, 남씨와 조씨는 청주를 더 선호한다. 따라서 청주가 2표 대 1표로 승리한다. 그러나 청주는 앞선 비교에서 맥주에 패하므로 꽁도세 승자가 아니다.

맥주는 와인과 청주 모두에게 일대일 다수결로 승리하므로 꽁도세 승자는 맥주이며, 이는 ②와 일치한다. 박씨는 비교되는 술의 대안이 아니라 선호를 가진 투표자이다.

NoteBase

문 14. 지니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분배가 균등할수록 지니계수가 커진다.

②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더 균등하다.

③ 지니계수의 최대값은 1이다.

④ 서로 다른 로렌츠곡선이라도 지니계수가 같을 수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지니계수는 소득분배의 불균등도를 나타내므로 **분배가 균등할수록 작아진다**. 완전평등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이 작을수록 지니계수가 0에 가까워진다.

선지별 해설

로렌츠곡선은 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차례로 누적한 인구비율과 그들의 누적 소득비율의 관계를 나타낸다. 45도 대각선은 완전평등선이며, 지니계수는 이 선과 로렌츠곡선 사이의 면적을 대각선 아래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① X: 소득분배가 균등해질수록 로렌츠곡선이 완전평등선에 가까워져 두 선 사이의 면적이 줄어든다. 따라서 지니계수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진다**. 완전평등이면 두 선이 일치하여 지니계수가 0이다.

② O: 대각선에서는 하위 20% 인구가 전체 소득의 20%를 얻는 식으로 인구비율과 소득비율이 같다. 로렌츠곡선이 이 대각선에 가까워질수록 소득이 더 균등하게 분배된 상태를 뜻한다.

③ O: 음수가 아닌 소득을 전제로 한 통상적인 이론적 지니계수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이다. 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의 극한을 나타내므로 이 문제의 최대값은 1이다. 백분율로 표시하는 0부터 100까지의 척도와 구별된다.

④ O: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의 모든 모양을 따로 기록하지 않고 완전평등선과의 면적 차이를 하나의 수치로 요약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로렌츠곡선이라도 **그 사이의 총면적이 같으면** 지니계수가 같을 수 있다. 동일한 지니계수만으로 소득분포가 완전히 같다고 판단할 수 없다.

NoteBase

문 15.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부문의 경제행위에 교란을 일으키지 않는 조세를 중립세라 한다.

②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과세를 교정과세라 한다.

③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세율이 증가하는 형태의 조세체계를 누진세제라 한다.

④ 환경세는 중립세에 해당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환경세는 오염에 비용을 부과하여 **오염을 줄이도록 행동을 바꾸는 교정과세**이다. 상대적인 경제적 선택을 왜곡하지 않는 중립세와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중립세는 **경제주체의 상대적인 선택을 왜곡하지 않는 조세**이다. 납세로 가처분소득은 줄 수 있지만, 특정 재화나 활동을 다른 대안보다 불리하게 만들어 자원배분을 교란하는 대체효과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② O: 교정과세는 외부효과 등 **시장실패의 원인을 가격에 반영**하여 사적인 선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과세이다. 예를 들어 오염 피해에 세금을 부과하면 생산자가 종전에 무시하던 외부비용을 고려하게 된다.

③ O: 누진세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평균세율이 상승**하는 조세체계이다. 평균세율은 소득에서 납부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소득 증가에 따라 납부세액이 늘어난다는 사실만으로 누진세제인 것은 아니며, 소득에 대한 세부담 비율이 높아지는지를 보아야 한다.

④ X: 환경세는 오염이나 환경에 해로운 활동에 비용을 부과하여 **오염 배출과 자원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교정과세**이다. 경제주체의 선택을 바꾸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중립세로 분류하지 않는다. 행동을 변화시키더라도 외부비용을 내부화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NoteBase

문 16. 공평한 조세부담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편익원칙이란 각 납세자가 정부서비스로부터 받은 혜택에 비례하여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능력원칙이란 각 납세자가 가진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③ 편익원칙은 빅셀(K. Wicksell)이 제시한 자발적 교환이론에 그 근원이 있다.

④ 대부분의 국가가 공평한 과세의 원칙으로 편익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현대 조세체계에서 공평한 부담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기준은 정부서비스의 수혜 정도보다 **소득·재산 등으로 나타나는 납세 능력**이다. 편익원칙은 개인별 편익을 측정하기 어렵고 소득 재분배에도 한계가 있어 일반적인 과세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

선지별 해설

① O: 편익원칙은 납세자가 공공서비스에서 얻는 편익에 맞추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받는 혜택과 부담을 연결**하므로 특정 시설 이용료처럼 수혜자를 구분하기 쉬운 경우에 적용하기 적합하다.

② O: 능력원칙은 각자의 담세능력, 즉 세금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담을 배분하는 원칙이다. 소득·재산·소비 등이 그 능력을 파악하는 지표이며, 정부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편익원칙과 다르다. 능력에 따른 부담이라는 말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③ O: 빅셀의 자발적 교환이론은 공공서비스의 편익과 그 비용인 조세를 함께 고려한다. 납세자가 얻는 편익과 조세 부담을 연결하여 동의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편익원칙의 이론적 기반**이 된다.

④ X: 대부분의 현대 국가에서 공평한 과세의 일반적인 기준은 **능력원칙**이다. 공공재의 개인별 편익은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편익에만 따라 과세하면 경제적 능력의 차이나 소득 재분배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편익원칙은 수혜자를 비교적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영역에서 보완적으로 활용된다.

NoteBase

문 17.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부담의 공평한 분배

② 행정적 단순성

③ 과세 재량권

④ 경제적 효율성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바람직한 조세제도는 납세자가 부담의 기준과 절차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성과 확실성**을 갖추어야 한다. 과세관청이 임의로 부담을 정하는 재량권의 확대는 그 요건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공평한 조세부담은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적절한 부담 기준에 따라 세금을 분배하는 것이다. 경제적 능력이 같은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수평적 공평**과 능력이 다른 사람을 적절하게 달리 대우하는 수직적 공평이 주요 기준이다.

② O: 행정적 단순성은 과세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고 집행하기 쉽게 만들어 **징세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비용뿐 아니라 납세자가 신고·납부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도 고려한다.

③ X: 과세 재량권 자체가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은 아니다. 세금의 대상·부담·납부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여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자의적이거나 불확실한 과세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상황에 대응하는 제도의 탄력성과 과세관청의 임의적인 재량은 구별된다.

④ O: 경제적 효율성은 조세가 소비·저축·노동·투자 등의 선택을 불필요하게 왜곡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면서 **자원배분 왜곡과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는 조세제도가 바람직하다.

NoteBase

문 18. 정액세(lump-sum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액세 부과는 대체효과를 발생시킨다.

② 예를 들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정 비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③ 납세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교란을 초래하지 않는다.

④ 우리나라 휘발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가 하나의 사례이다.

정답 3번

①

정액세는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고 가처분소득만 줄이므로 **소득효과만 발생하고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②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로 과세하는 것은 **비례세**이다. 정액세는 납세자의 소득이나 소비 등 경제활동과 무관하게 **일정한 금액을 부과**한다.

③

세액이 소비·노동 등의 선택과 무관하게 고정되므로 **상대가격과 한계적 선택 유인을 왜곡하지 않는다**.
소득효과는 발생할 수 있으나 대체효과에 따른 초과부담은 없다.

④

휘발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리터당 일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이므로 수량이 늘면 총세액도 늘어난다.
정액세는 소비량이나 소득 등 경제활동과 무관하게 총세액이 고정된다.

NoteBase

문 19. 간접세이면서 물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재산세

② 취득세

③ 소득세

④ 부가가치세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부하고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예정된 **간접세**이다. 소비자의 인적 사정보다 재화·용역의 거래를 중심으로 과세하므로 **물세**에도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직접세·간접세는 제도상 납세의무자와 세부담자가 일치하도록 예정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인세·물세는 납세자의 부양가족 등 인적 사정을 고려하는지, 과세대상인 물건이나 거래를 중심으로 부과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O/X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의 표시이다.

① X: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직접세이자 물세**이다. 보유한 과세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하므로 물세에는 해당하지만, 간접세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② X: 취득세는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부담하는 **직접세이자 물세**이다. 취득이라는 행위와 그 대상에 주안점을 두는 물세이지만, 판매자가 소비자로부터 걷어 납부하는 형태의 간접세는 아니다.

③ X: 소득세는 소득이 귀속되는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직접세이자 인세**이다. 부양가족 등 납세자의 인적 사정을 반영하는 공제 제도를 두므로, 간접세와 물세라는 두 조건에 맞지 않는다.

④ O: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거래 때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고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도록 예정된 **간접세**이다. 또한 소비자의 부양가족 수 등 인적 사정보다 재화·용역의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물세**이므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NoteBase

문 20. 경쟁시장의 소비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상향의 시장공급곡선과 우하향의 시장수요곡선을 가정함)

① 수요곡선이 종량세만큼 상향 이동한다.

② 소비자가 상품 1단위당 지불 의향이 있는 금액은 종량세 부과액만큼 커진다.

③ 종량세 부과로 인한 소비자잉여나 생산자잉여의 변동은 없다.

④ 종량세 부과 후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종량세가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경우와 동일하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같은 단위당 세액을 부과하면 소비자가 내는 총가격과 생산자가 받는 순가격 사이에 같은 조세 쐐기가 생긴다. 따라서 **법적으로 누가 세금을 납부하는지와 무관하게** 균형 거래량과 소비자 부담 가격은 동일하다.

선지별 해설

종량세는 상품 한 단위마다 일정액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비자에게 부과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포함 총가격은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가격보다 단위당 세액만큼 높다. 수요곡선의 이동 방향을 설명할 때는 세금 포함 가격과 생산자 수취가격을 구분해야 한다.

① X: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세로축에 놓으면, 소비자는 세금도 부담해야 하므로 같은 수량에서 생산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세액만큼 줄어든다. 따라서 세금 납부를 반영한 수요곡선은 **세액만큼 하향 이동**한다. 상향 이동이 아니다.

② X: 세금 부과 자체가 재화에서 얻는 효용이나 세금 포함 최대 지불의사를 높이지는 않는다. 소비자의 총지불의사가 그대로라면 그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생산자에게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은 세액만큼 감소한다.

③ X: 우하향 수요곡선과 우상향 공급곡선에서 종량세를 부과하면 거래량이 줄고, 소비자의 세금 포함 부담 가격은 오르며 생산자의 순수취가격은 내려간다. 이에 따라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모두 감소**한다. 감소한 잉여 중 일부는 정부의 조세수입이 되고 일부는 거래 감소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된다.

④ O: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든 생산자에게 부과하든 소비자 총부담 가격과 생산자 순수취가격의 차이는 동일한 단위당 세액이다. 같은 수요·공급 조건에서는 이 차이를 만족하는 균형 거래량과 양측 가격이 같아진다. 법적 납세자와 실제 경제적 부담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21. 쌀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4이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0.8이다. 정부가 쌀 생산자에게 kg당 1,000원의 물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쌀의 거래량은 감소한다.

② 소비자잉여는 증가한다.

③ 소비자는 물품세의 일부를 부담한다.

④ 생산자는 물품세의 일부를 부담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물품세로 소비자 지불가격이 상승하고 쌀 구입량이 줄어들므로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법률상 생산자에게 부과하더라도 경제적 세부담은 수요·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양쪽에 나뉜다.

선지별 해설

생산자에게 부과한 kg당 1,000원의 종량세는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생산자가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가격 사이에 1,000원의 차이를 만든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양의 유한한 가격탄력성을 가지므로 세부담은 양쪽에 나뉜다.

① O: 세금으로 쌀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소비자 지불가격이 높아지고 생산자가 실제 받는 가격은 낮아진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4로 0이 아니므로 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량이 줄어들며,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② X: 물품세 부과 후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오르고 구입량은 줄어든다. 따라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과 실제 지출액의 차이로 얻는 **소비자잉여는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다.

③ O: 생산자가 법률상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소비자 가격 상승을 통해 **세금의 일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 0.4는 공급의 가격탄력성 0.8보다 작으므로, 통상적인 조세귀착 분석에서 수요 측이 상대적으로 더 비탄력적이고 더 큰 부담을 진다.

④ O: 공급의 가격탄력성도 0.8로 유한하므로 생산자가 세금 전부를 소비자에게 넘길 수는 없다. **세금을 제외한 생산자 수취가격이 하락**하므로 생산자도 세금의 일부를 부담한다. 납세의무자가 생산자라는 사실만으로 생산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23. 다음 표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구간별 세율이다. 근로소득이 3,000만원이며 공제가 없는 사람의 경우 소득세액은?

과세 구간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① 450만원

② 366만원

③ 324만원

④ 180만원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초과누진세율은 소득 전체가 아니라 **구간별 소득에 나누어 적용**한다. 1,400만원까지의 세액 84만원과 초과분 1,600만원의 세액 240만원을 합하면 324만원이다.

계산 과정

공제가 없으므로 문제에서 계산에 사용하는 과세 대상 소득은 3,000만원이다. 표의 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이므로 **각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그 구간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 전액에 최고 적용세율 15%를 곱하지 않는다.

1,400만원 이하 부분에는 6%를 적용한다.
$1{,}400 \times \frac{6}{100} = 84$만원

1,400만원을 넘는 부분은 3,000 − 1,400 = 1,600만원이며, 이 금액에 15%를 적용한다.
$1{,}600 \times \frac{15}{100} = 240$만원
소득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표의 24%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없다.

두 구간의 세액을 합하면 84 + 240 = 324만원이다. 따라서 소득세액은 **324만원**으로 ③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4.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영세율과 면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면세는 기초생활필수품, 의료·교육 등 공익성이 높은 재화 및 서비스, 도서 등 문화관련 재화 등에 적용된다.

② 영세율이 적용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완전면세라 한다.

③ 면세제도에서 최종소비단계에 면세를 적용하면 그 직전 단계까지 누적된 부가가치세는 환급된다.

④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출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답 3번

①

미가공식료품 등 기초생활필수품과 법령에서 정한 **의료·교육 용역, 도서 등 문화 관련 재화**의 공급은 면세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2018.12.31, 2022.12.31, 2024.12.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 · 예방 · 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②

영세율은 매출에 0%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환급**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는 완전면세이다.

③

면세는 해당 단계의 매출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종소비단계가 면세여도 앞 단계의 세부담은 가격에 남는 불완전면세이다.

NoteBase

④

대부분의 국가는 소비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수출품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수출국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제거하고 수입국에서 국내 상품과 같은 기준으로 과세한다.

NoteBase

문 25. 지출세가 소득세에 비해 우월하다는 주장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플레이션 발생에 따른 행정적 어려움이 소득세보다 적다.

② 여가와 소득 간의 선택에 있어서 왜곡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③ 미실현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일생을 통해 볼 때 소비가 소득보다 안정적이므로, 지출세가 담세능력 기준으로 더욱 공평하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지출세는 저축을 곧바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로소득으로 살 수 있는 소비재의 양을 줄인다. 따라서 **여가와 근로 사이의 선택 왜곡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지출세는 개인의 소비지출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조세이다. 소득 중 저축되는 부분에는 당장 과세하지 않고 소비로 사용되는 단계에 과세한다. 저축·소비 시점의 선택에 대한 중립성과 근로·여가 선택에 대한 중립성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① O: 소득세에서는 물가상승 때문에 생긴 명목이자나 명목자본이득을 실질소득과 구별하고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하는 지출세는 이러한 자본소득 측정·조정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모든 세제 조정이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② X: 지출세를 내면 같은 근로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세후 소비가 줄어들어, 과세되지 않는 여가와 소비 사이의 상대적 가격이 달라진다. 따라서 **근로와 여가 사이의 선택을 왜곡할 수 있다**. 저축에 대한 불리한 과세를 줄인다는 점을 근로·여가 선택에도 아무 왜곡이 없다는 주장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③ O: 포괄적 소득세에서는 아직 팔지 않은 자산의 가치 상승도 소득에 포함하려면 미실현자본이득의 평가와 납세자금 확보 문제가 생긴다. 지출세는 미실현 가치 상승 자체를 당장의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으므로, 그 이득을 매년 평가하여 직접 과세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다.

④ O: 사람들은 저축과 차입을 이용해 일생의 소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하므로, 소비는 일시적으로 변동하는 연간 소득보다 장기적인 생활수준을 잘 나타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소비지출이 담세능력의 더 공평한 척도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지출세가 언제나 모든 기준에서 더 공평하다는 단정과는 구별된다.

NoteBase

문 26.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이 작아지는 경우는?

① 임금률이 높아지는 경우

② 임금총액이 증가하는 경우

③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이 커지는 경우

④ 근로소득세율이 낮아지는 경우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다른 조건이 같으면 근로소득세율이 낮아질수록 노동과 여가 사이의 선택을 왜곡하는 정도가 줄어든다. 통상적인 초과부담 근사식에서 초과부담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한다.

선지별 해설

다른 조건을 일정하게 놓는 통상적인 근사에서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은 $EB \approx \frac{1}{2}\varepsilon_L^c t^2 wL$로 나타낸다. 여기서 t는 세율, w는 세전 임금률, L은 기준 노동공급량, wL은 임금총액이며, ε_L^c는 보상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이다. 세금 자체가 아니라 노동 선택의 왜곡으로 발생하는 순후생 손실을 측정한다.

① X: 노동공급량·세율·탄력성이 같을 때 임금률이 높아지면 임금총액 wL이 커지고 단위 노동당 조세 쐐기도 커진다. 따라서 초과부담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진다**.

② X: 세율과 탄력성이 같을 때 임금총액 wL이 증가하면 동일한 비율의 왜곡이 적용되는 소득 규모가 커진다. 근사식에서 초과부담은 **임금총액에 비례**하므로 증가한다.

③ X: 초과부담을 결정하는 보상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이 커지면 같은 세후 임금 변화에 노동공급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노동 선택의 왜곡이 더 커져** 초과부담이 증가한다. 소득효과까지 포함한 관측 노동공급의 변화와는 구별한다.

④ O: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근로소득세율이 낮아지면 세전 임금과 세후 임금의 차이가 줄어 노동공급을 왜곡하는 정도가 작아진다. 초과부담이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세율 하락은 초과부담을 줄인다.

NoteBase

문 27. 램지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필수품에는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여야 한다.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각 재화의 세율을 결정해야 한다.

③ 공평성 측면을 고려한 과세 원칙이다.

④ 각 재화에 대해 단일세율로 물품세를 부과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램지규칙은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면서 **조세의 초과부담을 최소화**하려는 효율성 기준이다. 기본적인 역탄력성 규칙에서는 가격 변화에 수요가 덜 반응하는 재화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필수품은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아 가격이 올라가도 소비가 크게 줄지 않는다. 효율성만 고려하는 기본 역탄력성 규칙에서는 이런 재화에 오히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필수품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주로 저소득층의 부담 등 공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② O: 공급이 완전탄력적이고 재화 간 수요의 교차효과를 무시할 수 있는 기본 모형에서 최적 세율은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절댓값에 반비례한다. 수요가 비탄력적인 재화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주어진 세수를 확보하면서 소비량 왜곡과 **초과부담을 상대적으로 작게** 만들 수 있다. 엄밀한 효율성 분석에서는 소득효과를 배제한 보상수요의 반응을 고려한다.

③ X: 기본적인 램지규칙의 목적은 주어진 세수를 확보할 때 발생하는 **효율성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직접 기준으로 삼는 규칙은 아니다. 필수품에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어 공평성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

④ X: 재화별 수요 반응이 다르면 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최적은 아니다. 기본 역탄력성 규칙은 **탄력성이 작은 재화에는 높은 세율, 큰 재화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관련 탄력성 등 조건이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동일 세율이 도출될 수 있지만 모든 재화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항상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NoteBase

문 28. 상속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취득형에 속한다.

② 유산취득형은 상속인별로 누진세가 적용된다.

③ 유산과세형은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④ 유산과세형은 분할상속에 따른 상속세 기피가 불가능하다.

정답 1번

①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과세형**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유산취득형은 유산을 상속인에게 나눈 뒤 **각 상속인의 취득가액에 누진세율을 개별 적용**한다.

③

유산과세형은 **분할 전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삼아 상속세를 계산한다.

④

유산을 여러 상속인에게 나누어도 **분할 전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분할상속으로 적용세율을 낮출 수 없다.

NoteBase

문 29. 탈세와 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경제행위를 변경하는 것을 절세라 한다.

② 탈세란 경제주체가 조세납부를 기피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③ 세율이 높을수록 탈세액이 증가한다.

④ 세무조사 확률이 높을수록 탈세액이 증가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세무조사 확률이 높아지면 탈세가 적발되어 추징과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탈세액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반응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절세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경제행위를 바꾸어 조세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세 부담이 낮은 상품이나 거래방식을 합법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② O: 탈세는 소득을 숨기거나 비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납부할 세금을 줄이거나 내지 않는 행위이다. 절세와 탈세는 모두 세 부담을 줄이려 하지만, **수단의 합법성**에서 구별된다.

③ O: 세율 상승으로 탈세의 이익이 커져 탈세를 늘릴 유인이 생긴다는 일반적인 취지의 설명이다. 같은 금액의 소득을 숨기더라도 세율이 높으면 납부하지 않는 세액이 커진다. 다만 이는 **탈세 이익이 커지는 효과**를 설명한 것으로, 실제 탈세 규모가 모든 모형에서 반드시 증가한다는 뜻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실제 반응은 벌금의 부과기준과 납세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④ X: 세무조사 확률이 높아지면 같은 규모의 탈세에 대해서도 적발되어 세금을 추징당하고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탈세의 기대이익이 낮아지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탈세를 줄이게 된다. 따라서 '탈세액이 증가한다'는 **'탈세액이 감소한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30. 정부지출 증가의 원인에 관한 가설로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브라운-잭슨(Brown-Jackson) - 중위투표행동

② 보몰(W. Baumol) -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

③ 피콕-와이즈만(Peacock-Wiseman) - 리바이어던 가설

④ 뷰캐넌(J. Buchanan) - 재정착각가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피콕-와이즈만은 전쟁 같은 사회적 격변을 계기로 조세와 정부지출 수준이 높아지는 **전위효과**를 설명했다.
정부가 자신의 수입을 극대화하려 한다는 **리바이어던 가설**은 브레넌과 뷰캐넌의 논의이다.

선지별 해설

정부지출 증가를 설명하는 가설은 유권자의 수요, 공공서비스의 생산비용, 사회적 격변, 재정부담에 대한 인식 등 서로 다른 원인에 주목한다.

① O: 브라운-잭슨의 설명은 **중위투표자의 공공서비스 수요**에 주목한다. 다수결에서 중위투표자의 선호가 지출 수준을 좌우한다는 틀 아래, 그의 소득·조세부담·선호 변화가 정부지출 수요를 변화시킨다고 본다.

② O: 보몰은 노동집약적인 공공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상대적으로 느린 데 비해 임금은 다른 부문의 임금 상승을 따라가는 현상에 주목했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단위당 비용이 상승**하므로 정부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순히 공무원이 비효율적으로 일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③ X: 피콕-와이즈만과 연결되는 것은 **전위효과**이다. 전쟁 등으로 더 높은 조세부담이 수용되고 정부지출이 급증하면, 위기가 끝난 뒤에도 재정 규모가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리바이어던 가설은 브레넌과 뷰캐넌이 정부를 자신의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주체로 파악한 설명이다.

④ O: 뷰캐넌의 재정착각 논의는 납세자가 재정의 비용과 편익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에 주목한다. 조세부담이 잘 드러나지 않아 실제보다 작게 느껴지는 등 **부담을 과소평가**하면 정부지출 확대를 더 쉽게 지지할 수 있다.

NoteBase

문 31. 환경세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수입이 증가하여 다른 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② 오염자지불원칙의 정신에 부합한다.

③ 오염배출권 거래제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자가 지불하는 비용의 변동성이 감소한다.

④ 오염 배출량이 직접적으로 통제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환경세는 오염 배출의 비용을 높이는 **가격 수단**이다. 기업이 그 가격에 반응하여 감축량을 선택하므로 **배출량 자체를 직접 통제하는 방식은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환경세는 정부에 세수를 제공하므로, 그 수입을 활용하여 **기존의 다른 조세를 줄일 여지**가 생긴다. 환경개선과 세수 활용이라는 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 감세 여부와 전체 후생효과는 세수의 사용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진다.

② O: 오염으로 외부 피해를 발생시킨 주체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오염자가 자신의 오염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오염자지불원칙에 부합하며,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염을 감축할 유인도 제공한다.

③ O: 정해진 세율 아래에서는 배출자가 오염 한 단위를 추가 배출할 때 부담할 세액을 미리 알 수 있다. 반면 배출권 가격은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변하므로, 환경세는 **단위 배출의 가격을 더 예측 가능하게**한다. 이는 생산량이나 배출량 변화와 무관하게 총지출까지 고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④ X: 환경세는 배출에 가격을 부과하여 기업이 세금 부담과 감축비용을 비교하도록 만드는 **가격을 통한 간접적 통제**이다. 기업의 선택에 따라 배출량이 결정되므로 정부가 배출량 자체를 직접 확정하는 방식은 아니다.
배출총량을 직접 정하는 방식은 수량규제나 총량을 설정한 배출권거래제이다.

NoteBase

문 32. 공공요금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설용량이 정해진 공공시설에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면 효율성을 위해 한계비용과 경제적 지대를 합산한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② 필수품에 대해 램지가격을 설정하면 분배 측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③ 공평성의 관점에서 보면 능력원칙에 입각하여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④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평균비용가격설정은 과소생산을 유발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공공요금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는 편익과 부담을 연결하는 **편익원칙**이 기본이다. 소득·재산에 따른 부담을 강조하는 능력원칙을 공공요금의 일반적인 부과 원칙과 혼동하면 안 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시설용량이 고정되어 있는데 한계비용 수준의 요금에서 수요가 용량을 넘으면, 그 요금만으로는 희소한 시설의 이용을 조정할 수 없다. 이때는 한계비용에 **용량 부족에 따른 희소가치인 경제적 지대**를 더한 요금으로 수요를 조정한다. 경제적 지대는 제한된 용량을 이용하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을 반영한다.

② O: 램지가격은 일정한 수입 또는 수지균형 제약 아래 효율성 손실을 줄이도록 재화별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다. 기본적인 경우 수요가 비탄력적인 필수품에는 한계비용을 넘는 가격 인상 폭이 커질 수 있다. 필수품 지출 비중이 큰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주어 **분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 X: 공공서비스의 요금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익을 얻는 사람이 부담한다는 **편익원칙 또는 수익자부담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능력원칙은 소득·재산 등 부담 능력에 따라 조세를 배분하는 기준이다. 저소득층 요금 감면 등에서 능력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이를 공공요금 전체의 기본 부과 원칙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O: 규모의 경제가 있는 구간에서는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비용이 하락하므로 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낮다. 평균비용 수준에서 요금을 정하면 한계비용가격보다 가격이 높아져 이용량이 줄어든다. 따라서 한계비용에 가격을 맞추는 효율적 수준과 비교하여 **과소생산 또는 과소이용**이 발생한다.

NoteBase

문 33. 주민의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feet)”에 의해 지역공공재의 공급이 사적 재화가 공급되는 시장과 유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주장한 사람은?

① 니스카넨(W. Niskanen)

② 티부(C. Tiebout)

③ 린달(E. Lindahl)

④ 케인즈(J. Keynes)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티부는 주민이 원하는 지역공공재와 조세 부담의 조합을 찾아 **거주지를 선택·이동**하는 방식으로 선호를 드러낸다고 보았다. 이러한 ‘발에 의한 투표’가 시장에서의 소비자 선택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핵심 풀이

티부는 주민이 자신에게 맞는 지방세 부담과 지역공공재 공급의 조합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선호를 드러낸다고 보았다. **거주 지역을 선택하는 행위가 선호의 표시**가 된다는 점에서 이를 ‘발에 의한 투표’라고 한다.

서로 다른 서비스·조세 조합을 제공하는 여러 지방정부 중에서 주민이 지역을 선택하면, 비슷한 선호를 가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다. 이 지역 간 선택이 사적 재화 시장에서 소비자가 상품을 고르는 역할과 유사하게 작동하여 지역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 가능성을 설명한다.

이는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 지역의 서비스와 조세에 관한 충분한 정보, 선택 가능한 여러 지역 등의 강한 가정 아래 성립하는 모형이다. 현실의 모든 지방정부가 **자동으로 효율적이라는 주장으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니스카넨은 관료의 예산 극대화 행동을 설명한 인물이다. 린달은 공공재에 대한 개인별 편익에 맞춘 조세가격으로 공공재 공급과 비용 분담을 설명하며, 케인즈는 유효수요와 경기 안정화 정책에 관한 이론으로 구별된다.

따라서 제시된 ‘발에 의한 투표’의 주창자는 티부이며, 선택지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34. 재정연방체제이론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배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세부담-편익 연계가 강한 공공재는 중앙정부가, 그렇지 않은 공공재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부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는 공공재는 중앙정부가, 긍정적 외부성이 존재하는 공공재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국방과 외교는 중앙정부가, 쓰레기 수거와 거리 청소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무임승차의 가능성이 높은 공공재는 지방정부가, 그렇지 않은 공공재는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정부 간 기능배분에서는 **서비스 편익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가 중요하다. 국방·외교처럼 편익이 전국에 미치는 기능은 중앙정부가, 쓰레기 수거·거리 청소처럼 편익이 지역에 집중되는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맡는 것이 적합하다.

선지별 해설

① X: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조세와 그 지역에서 받는 편익의 연계가 강한 서비스는 **지방정부 공급에 적합**하다. 지방정부는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고 비용 부담과 혜택을 연결하기 쉽다. 반대로 편익이 전국에 퍼져 특정 지역의 부담과 연결하기 어려운 기능은 중앙정부가 담당할 필요가 크다.

② X: 외부효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만으로 담당 정부를 나누지 않는다. 핵심은 **외부효과가 지방정부의 관할 구역을 넘어서는지**이다. 편익의 누출이든 피해의 전가이든 지역 경계를 크게 넘으면 더 넓은 범위의 중앙정부가 개입하거나 조정하여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필요가 있다.

③ O: 국방과 외교는 편익이 전국에 미치고 국가 차원의 통일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 쓰레기 수거와 거리 청소는 편익이 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고 지역별 여건도 다르므로 **지방정부가 주민 수요에 맞추어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X: 다른 지역이 비용을 부담한 서비스의 편익을 무상으로 누리는 등 지역 간 무임승차 가능성이 크면 지방정부별 공급만으로는 충분한 공급과 비용 분담을 이루기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더 넓은 범위에서 비용과 편익을 포괄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편익이 지역 안에 한정되고 부담과 편익을 연결하기 쉬운 서비스는 지방정부 공급에 적합하므로 선지는 배분 방향을 바꾸어 설명했다.

NoteBase

문 35. 어떤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의 흐름은 아래의 표와 같다. 연간 할인율이 100% 일 때, 이 공공사업안의 순현재가치는 얼마인가?

	현재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비용	1,000	1,500	-	-	-
편익	-	-	4,000	6,000	3,360

① 100

② 210

③ 320

④ 4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연간 할인율이 100%이므로 각 연도의 금액을 **2의 해당 연도 제곱으로 나누어**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편익의 현재가치 1,960에서 비용의 현재가치 1,750을 빼면 순현재가치는 210이다.

계산 과정

순현재가치(NPV)는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값**이다. 할인율 100%는 r = 1이므로 t년 후 금액은 $(1 + r)^t = 2^t$로 나눈다. 표에 금액의 단위가 따로 없으므로 계산 결과도 표와 같은 단위로 나타낸다.

현재 비용 1,000은 이미 현재 시점의 금액이므로 할인하지 않는다. 1년 후 비용 1,500은 한 번 할인하므로 현재가치는 $\frac{1,500}{2} = 750$이다. 비용의 현재가치 합계는 1,000 + 750 = 1,750이다.

2년 후 편익 4,000의 현재가치는 $\frac{4,000}{2^2} = 1,000$이다. **편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2년 후**이므로 2로 한 번만 나누지 않는다.

3년 후 편익 6,000의 현재가치는 $\frac{6,000}{2^3} = 750$이다.

4년 후 편익 3,360의 현재가치는 $\frac{3,360}{2^4} = 210$이다. 따라서 편익의 현재가치 합계는 1,000 + 750 + 210 = 1,960이다.

순현재가치는 1,960 − 1,750 = 210이다. 따라서 표와 같은 단위로 계산한 210에 해당하는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36.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의 우선순위 혹은 실행 여부를 결정할 때 활용하는 제도는?

① 예비타당성 조사

② 국민참여예산제도

③ 성과관리예산제도

④ 지방재정 분석

정답 1번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의 예산 편성 전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투자의 우선순위와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4.1.1, 2020.6.9, 2025.10.1, 2026.2.10>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해당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제외한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삭제<2026.2.10>
4. 그 밖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 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NoteBase

③

성과관리예산제도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로 달성 여부를 측정**하여 재정사업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대규모 신규 투자의 우선순위와 추진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이다.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 · 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4.1.1, 2020.6.9, 2025.10.1, 2026.2.10>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해당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제외한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삭제<2026.2.10>
4. 그 밖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 · 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NoteBase

문 37.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① 개인연금

② 국민연금

③ 건강보험

④ 고용보험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개인연금은 개인이 선택하여 준비하는 **사적 노후소득 보장 수단**이다. 법에 따라 공적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는 구별된다.

선지별 해설

사회보험은 노령·질병·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비하도록 법에 따라 운영하는 공적 보험제도이다. 아래 O/X는 사회보험제도에 포함되는지를 나타내며, 발문은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묻는다.

① X: 개인연금은 개인이 노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자신의 선택으로 가입하는 사적 연금**이다. 민간 금융기관과의 계약이나 금융상품을 통해 준비하는 방식이므로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구별된다.

② O: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비하는 공적 사회보험이다. 법에 정해진 대상과 요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본인이나 유족이 연금급여를 받는다.

③ O: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사회보험이다. 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보험급여를 제공하므로 개인이 별도로 가입하는 민간 의료보험과 구별된다.

④ O: 고용보험은 **실업에 따른 소득 감소와 재취업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사회보험이다. 실업급여뿐 아니라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관련 사업 등을 통해 고용 유지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NoteBase

문 38. 리카르도 대등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제주체는 국공채를 순자산의 일부로 인식한다.

② 국공채 발행에 의한 재정적자는 민간의 저축을 증가시킨다.

③ 재정적자로 인한 국공채 발행의 부담은 미래세대로 전가되지 않는다.

④ 재원조달 방식이 국채발행인지 증세인지와 무관하게 정부지출 증가의 효과는 동일하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리카르도 대등정리에서는 국공채 자산의 증가가 상환에 필요한 **미래 조세부담**과 상쇄되므로 민간의 순자산이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조세를 국공채 발행으로 바꾸어도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리카르도 대등정리는 정부지출 경로가 같을 때 현재 조세와 국공채를 통한 미래 조세가 민간의 선택에 동일한 영향을 준다는 명제이다. 미래를 내다보는 경제주체, 원활한 차입·저축, 비왜곡적 조세, 세대 간 이타적 유산 동기 등 강한 가정 아래 성립한다.

① X: 국공채는 보유자에게 금융자산이지만, 민간 전체가 고려하는 **순자산의 증가분은 아니다**. 정부가 원리금을 갚기 위해 거둘 미래 조세의 현재가치가 국공채 자산의 가치와 상쇄되기 때문이다. 국공채를 순자산 증가로 인식한다는 설명은 대등정리와 반대이다.

② O: 정부지출이 같고 현재 조세를 줄인 만큼 국공채를 발행하면, 민간은 미래 증세에 대비하여 **감세분을 저축**한다. 민간저축 증가가 정부저축 감소를 상쇄하므로 국공채로 조달한 재정적자 자체가 총수요를 추가로 늘리지 않는다.

③ O: 이 정리에서 현재 세대는 자녀 등 후손의 미래 조세부담도 고려한다. 국공채 상환을 위한 후손의 부담이 늘면 유산으로 남길 저축을 늘려 보완하므로, 국공채 발행만으로 **미래세대에 순부담을 전가하지 못한다**. 이는 세대 간 이타적 연결 등을 전제로 한 결과이지 모든 현실의 국채에 무조건 적용되는 주장은 아니다.

④ O: 같은 정부지출 증가를 현재 증세로 조달하든 국공채 발행과 미래 증세로 조달하든 민간이 인식하는 생애 조세부담은 같다. 따라서 **재원조달 시점의 차이**만으로 소비나 총수요에 서로 다른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정부지출 자체의 효과가 반드시 없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39.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채무는 재정수지 적자의 누적이다.

② 물가가 상승하면 국가채무의 실질가치는 감소한다.

③ 이전지출의 증가는 재정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다.

④ 정부지출의 증가는 구축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이전지출도 정부의 재정지출에 포함된다. 수입과 다른 지출이 같다면 이전지출이 늘수록 **재정흑자는 줄고 재정적자는 커지므로** 재정수지가 악화된다.

선지별 해설

재정수지는 일정 기간의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흐름이고, 국가채무는 특정 시점에 정부가 갚아야 할 채무의 잔액이다. 다음 판단은 재정수지의 기본적인 수입·지출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① O: 재정수지가 적자이면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국채 발행 등의 차입으로 조달할 수 있고, 그만큼 채무가 쌓인다. 따라서 기본 모형에서 국가채무는 **과거 재정적자가 누적된 잔액**으로 이해한다. 재정수지는 유량, 국가채무는 저량이라는 차이가 있다.

② O: 상환할 명목금액이 정해진 채무의 실질가치는 명목채무를 물가수준으로 나눈 값이다. **명목채무가 일정할 때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같은 금액의 구매력이 줄어 국가채무의 실질가치도 감소한다.

③ X: 이전지출은 정부가 가계 등에 지급하는 연금·보조금과 같은 지출로,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지 않더라도 재정의 지출에 포함된다. **정부 수입과 다른 지출이 같다면 이전지출 증가는 재정수지를 악화**시킨다. 흑자는 줄고 적자는 커지므로,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직접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

④ O: 정부지출 확대를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면 자금 수요가 늘고 금리가 올라 민간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 이처럼 공공지출 확대가 **민간지출의 일부를 밀어내는 현상**이 구축효과이다. 발생 정도는 유휴자원이나 통화정책 등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항상 같은 크기로 발생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정수지의 기본 관계에 어긋나는 설명은 ③이다.

NoteBase

문 40. 정부의 세금 인하의 거시경제적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금 인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해당한다.

② 가계의 소비를 증가시켜 총수요가 증가한다.

③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증가시켜 화폐수요가 증가한다.

④ 세금 감소와 동일한 크기의 정부지출 감소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총수요는 불변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감세액은 일부만 소비되지만 정부지출 감소액은 총수요를 직접 줄인다. 두 금액이 같으면 **정부지출 감소의 효과가 더 커서 총수요는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통상적인 단기 케인스 모형에서는 가계가 늘어난 처분가능소득의 일부를 소비하고 나머지를 저축한다고 본다. 따라서 한계소비성향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① O: 세금 인하는 가계가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늘려 민간지출을 자극하므로 **총수요를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다. 이는 세금 인하 자체의 방향을 판단한 것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다른 정책의 효과와는 구별한다.

② O: 다른 조건이 같다면 세금 감소로 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나고, 가계는 그 일부를 추가 소비한다. 소비는 총수요의 구성요소이므로 **소비 증가가 총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③ O: 감세로 가계의 소비지출이 늘고 생산·소득도 확대되면 거래에 필요한 화폐 보유 수요가 커진다. 이는 **지출과 소득 확대에 따른 거래적 화폐수요의 증가**이며, 세금 인하가 화폐공급을 직접 늘린다는 뜻은 아니다.

④ X: 감세액 중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일부인 반면, 정부지출 감소는 그 금액만큼 총수요를 직접 줄인다. 따라서 세금과 정부지출을 같은 금액만큼 줄이면 **정부지출 감소 효과가 감세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보다 크므로 총수요가 감소**한다. 정부지출승수의 크기가 조세승수의 절댓값보다 크기 때문에 두 효과가 상쇄되지 않는다.

NoteBase